

광주시·전남도, 행정 통합 추진 '가속 폐달'

시·도지사 공동선언문 발표 3일 만에
통합추진기획단 각각 출범 본격 가동
추진협의체 운영…시·도민 의견수렴
姜시장 "부강한 광주·전남 열망 실현"
김지사 "통합이 곧 경제이자 일자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 통합 추진에 '가속 폐달'을 밟고 있다. 양 시·도가 5일 동시에 추진기획단을 각각 출범시키고 정지적 선언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행정 통합을 위한 실행 단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관련기사 3·4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각각 시청 2층과 도청 18층에서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갖고 행정 통합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진기획단 출범은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 통합 공동 선언'의 후속 조치다. 공동 선언 3일 만에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광주·전남 대통합이 논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준비와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의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은 1단 2과 16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김영문 문화경제부



'대부흥의 새역사 출발'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벽두부터 행정 통합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5일 강기정 광주시장(사진 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사진 오른쪽)가 각각 행정통합 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갖고 있다.



2026. 1. 5.(월)

전라남도

/조영권기자·전남도 제공

시장이 맡는다.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전남도의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은 1단 2과 22명으로 구성됐다.

양 시·도 추진기획단은 ▲통합 준비 기본구상 안·종합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특례 발굴 ▲

시·도통합추진협의체 구성·지원 ▲도민 의견 수렴·대외 홍보 등 행정 통합 전반을 총괄한다.

양 시·도 기획단은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 행정 통합 논의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현판식 제막에 앞서 '대한민국 제1호 통합 광역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출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역사적 320만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새 시대를 활짝 열도록 광주·전남 시도

민의 히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국 3특' 체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 시·도

지사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통합이 이뤄지면 그동안 양 시·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REI 100

산업단지 조성, 민·군 통합 공항 조성 등 초광역

핵심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국가전략산업 유치와 지역 성장동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30년 간 행정 통합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 김

영록 지사의 선제적 제안, 저의 결단으로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부강한 광주·전남에 대한 시·

도민의 열망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압도적 지지

로 이미 보여줬으며 추진단 출범을 시작으로 부

강한 광주·전남의 열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는 통합 지역 주도 성장,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페스트펭귄'"이라며 "행정 통합이 된다면 서울특별시 수준의 특별시가 될 뿐만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차지 분권 권한을 얻게 될 것이다. 미래 산업의 전폭적인 투자 기회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최우선 인센티브도 주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록 지사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2026 대한민국 대도약을 광주·전남에서 시작하겠다"며 "통합은 곧 경제이고 일자리, 균형발전이다. 떠나거나 시간이 없다. 지금이 바로 통합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韓中, 환경 등 협력문서 15건…산업장관회의 정례화

K푸드 수출 지원·지재권 등 MOU
안정적 농축산물 무역도 뒷받침 약속

한국과 중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 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환경·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문서를 다수 체택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체택된 문건은 양해각서(MOU) 14건과 한국에 있는 중국의 문화유산을 중국 측으로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등 모두 15건이다.

우선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었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

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동시에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 양 국 산단 간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 분야별 협력 논의도 이어졌다.

우선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연구자 간 교류를 확대하는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관한 MOU'와 '디지털 기술 협력 MOU'

를 체결했다.

또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고,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MOU' 및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마련 및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단속 효율성 제고

를 모색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 및 기후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한 장관·국장급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중심에서 기후변화, 순환 경제 등 글로벌 이슈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통 분야 협력 MOU'에는 양국이 육상교통, 도로, 철도, 미래 모빌리티 등 관련 협력 추진 및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 분야에 대한 협력 문서도 있었다.

먼저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K푸드 수출을 지원하기로 했고,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MOU'를 통해 냉장 병어 등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수출입동식물 겸역 협력 MOU'로 안정적 농축산물 무역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새해 벽두 '불장'…4,450선도 '훌쩍'

외인 2조원 순매수·반도체 대장주 견인

코스피가 5일 4,450선을 넘어서는 등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새해 벽두부터 불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 일 대비 3.43%(147.89) 오른 4,457.52로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4,500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일 새해 첫 거래일에 4,300선을 돌파(종가 4,309.63)한 지난 하루만에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종목으로는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날 2조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K-증시 전성시대를 이끄는 투자자로 자리매김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11월 4,200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4,400선까지 도달하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연초 '폭등 렐리'를 하는 이유로 ▲AI 반도체 수요 폭발 ▲수출 호조 ▲외국인 매수세 등이 꼽히고 있다.

이 밖에 벤처업 정책의 결실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저평가된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등 호재가 남아 있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선 시대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임채만 기자

Today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 올려 주세요 6면

극한우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만든다 7면

2026시즌 출발…KIA의 최대 과제는? 16면

광주 취업률 1위 서영대학교
76.4%
(2024년 대학정보공시, 일반대학+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 기준)